

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

-
1.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
(민주당제2정책조정위원장 강운태)
 2.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점과 대응 방향
(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)
-

2001. 8. 28

1.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

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강운태

1. 최근 경제상황

- 작년 4/4분기 이후 산업생산, 투자, 수출 등 제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성장세가 크게 둔화

(전년 동기비 %)

	2000		2001			
	연간	4/4	1/4	2/4	6월	7월
수출 증가율(%)	19.9	6.1	2.1	△11.4	△14.6	△20.5
투자증가율(%)	30.1	5.6	△6.3	△4.7	△2.9	-
산업생산 증가율(%)	16.8	7.6	5.0	1.7	△2.7	-
GDP 성장률(%)	8.8	4.6	3.7	2.7	-	-

- 그 동안 호전되던 기업 및 소비자의 심리지표도 7월부터 다시 위축

(전년 동기비 %)

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BSI(전경련)	102.4	107.7	115.5	114.3	104.6	90.2
CSI(통계청)	94.1	96.3	99.5	100.3	98.4	-

- 그러나 민간소비, 건설경기 등 내수관련 지표는 경기조절정책에 힘입어 2/4분기부터 호조

(전년 동기비 %)

	2000	2001		
		1/4	2/4	7월
민간소비	7.1	0.9	2.9	
건축허가면적	11.8	△14.0	1.7	
국내건설수주	15.1	△25.3	22.7	

2. 어려움의 원인

□ 세계경제의 동반침체

- 세계 경제의 둔화세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

※ 미국과 일본의 2/4분기 GDP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
(전기대비, %)

	GDP 성장률			2001년 성장률 전망		
	00년	01.1/4	2/4	IMF 전망		최근 전망 (01.7~8)
				(00.9)	(01.5)	
미국	4.1	1.3	0.7	3.2	1.5	1.25~2.0(IMF)
일본	1.7	0.5	-	1.8	0.6	△0.2(차체)
유로	3.4	2.5	-	3.4	2.4	2.0(IMF)

-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·일본·유로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심화

※ 그 동안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던 대만·싱가폴도 2/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금년도 성장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

* 대 만 : (연초) 4.0% → (01.8) △0.4%,

* 싱가포르 : (연초) 5~7% → (01.4) 3.5~5.5% → (01.7) 0.5~1.5%

□ 구조조정의 고통

-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가 실제 경제상황보다 싸늘

□ 사회적 갈등과 정치권의 반목

-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집단간·이념간 갈등이 심화되고, 정치는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갈등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 - 기업과 가계의 경제하려는 의지에 찬물

3. 세계속의 우리 경제성적표

□ 상대적 우위 - 플러스 성장세 유지

-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
 - ※ 2/4분기 이후 아시아에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, 중국, 인도 등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
- 한국이 그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, 우리의 경제구조가 견실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
 - ※ 자동차·조선·철강 등 전통산업의 기반이 아직은 견고
 - ※ 경쟁국 대비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위

□ 지난 3년 6개월의 성과

- 최단기간내 IMF 졸업
 - ※ 8.23일자로 IMF차입금 195억불을 3년 앞당겨 전액 조기 상환, 이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중 최초
-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
 - ※ 건전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과 제도·원칙 마련
- I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
 - ※ IT산업이 GDP의 16%, 수출의 43%를 차지
 - ※ 초고속인터넷가입자 : 한국 8.5%, 미국 1%, 일본 0.4%
- 사회보장의 기본 틀 마련 완비
 - ※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확대 실시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

4.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

□ 대외의존도 심화

- IMF 이후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수출확대 정책에 따라 무역의존도 심화
 - ※ 무역의존도(재화) : '90년(53.4%) → '96년(53.8%) → '00년(72.7%)
- 반면, GDP 대비 민간소비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
 - ※ 민간소비비중 : '97년(54.1%) → '00년(50.4%)
 - ※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 : '97(32.1%) → '00. 1/4(22.9%)
- 내수기반의 취약과 높은 대외의존도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환경변화에 취약

□ 수출경쟁력 약화

-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에 밀려나고 있음
 - ※ 세계시장점유율('95→'00)
 - 한국 : 미국(3.3→2.3), 일본(5.1→5.4)
 - 중국 : 미국(6.1→8.2), 일본(10.7→14.5)
 - ※ 세계1등상품 : 한국(55개), 미국(924개), 중국(450개), 일본(360개), 대만(122개)
 - ※ GDP(억\$)('96→'00) : 한국(5,200→4,574), 중국(8,165→18,000)
- 우리의 교역조건(수출단가÷수입단가, '95=100)이 지속적으로 악화, 수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축소 - GDP와 GNI의 괴리 확대
 - ※ 교역조건지수 : '98(84.2)→'99(82.4)→'00(72.2)→'01상반(67.6)
 - ※ '00년 GDP는 8.8% 증가한 반면, GNI는 2.3% 증가

□ 산업간·지역간 불균형

- IMF 극복과정에서 IT산업이 성장을 주도

※ 최근, 경제를 지지하던 IT 산업의 불황으로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 - 오히려 전통산업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

<IT산업 비중>

	'99	'00	'01	
			1/4	2/4
GDP 비 중	12.2	15.3	16.7	15.5
성장 기여율	32.8	50.5	70.0	19.0
수 출 비 중	35.4	42.8	43.3	43.2
(반도체)	(13.1)	(15.1)	10.5(1~7월)	

- 지역간 산업생산지수는 2배 이상 차이

※ 산업생산지수('00. 2/4) : 전국 151.5, 경기 223.6, 대구 88.8

※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 억제에 소극적 규제위주에서 지역의 자율적·창의적 발전을 유도하는 적극적 조장위주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-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

□ 개혁피로감과 경제심리 위축

- 우리 경제의 성적이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경제심리가 필요이상으로 위축, 소비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
- 경제심리 위축은 개혁피로감, 사회적 분열양상, 정치권의 반목 등에 기인
-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, 경제정책 못지 않게 건전한 사회적 합의문화의 창출도 긴요

5.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

< 기본 방향 >

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, 거시경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기조절 정책을 병행 → 경제체질을 강화

- 세계경제상황에 따른 예비대응방안(contingency plan)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
- 경기조절정책은 재정지출 확대, 감세정책, 통화신용정책 등을 병행

□ 재정정책

- 연초 계획대비 하반기 중 10조원 정도의 재정지출 확대 추진
 - ※ 추경(5조 555억원) + 불용·이월요인 최소화(5조원 정도)
 - ※ 추경재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으로 국채 발행 없이 조달
- 예산·기금·공기업의 3/4분기 투자계획을 당초계획보다 4.3조원 증대(26조원 → 30.3조원)

□ 조세정책

-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,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기본 전제하에 세제개편 추진 중
 - ※ 봉급생활자, 중소기업자의 세부담 경감
 - ※ 투자·수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
 - ※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리

- 미국 및 일본과 같은 대규모 감세정책은 상이한 환경과 실패 경험에 비추어 한계
 - ※ 미국의 감세정책은 흑자재정과 높은 소득세 비중에 바탕
 - ※ 일본은 감세정책이 실패로 돌아감

□ 통화신용정책

- 통화신용정책은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기조 유지가 바람직
- 한국은행이 올들어 콜금리를 3차례 인하(5.25%→4.5%), 시장금리 및 은행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수신 신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저등급 회사채 발행이 계속 활기를 띠면서 기업자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 여건은 한층 호전

<기업자금 조달 추이>

(기간중 증감, 억원)

	2001.2	3	4	5	6	7
회사채 순발행	33,529	14,339	16,816	13,858	28,873	26,606
C P 순발행	-626	5,725	14,477	4,201	-16,788	15,483
주식 발행	415	3,031	2,355	2,854	3,715	5,323

□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

- 그 동안 마련된 법과 제도의 바탕 위에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 지속 추진
 - ※ 신용위험평가대상 1,544개 기업 중 546개 기업에 대한 처리방향을 확정(정리대상 71개 기업)
- 개혁의 중점이 건전성·투명성(필요조건)의 바탕 위에 수익성과 미래가치창출(충분조건) 중심으로 발전되어가야 함

<기업 경영환경 개선>

-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고취하기 위한 규제완화 종합대책 추진(세제·금융상 뒷받침 등)
-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변경
-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원용한 29개 법률의 규제범위를 조정
- 부채비율 200% 상한제도 탄력적 운용
- 기업 현장의 애로 타개를 위한 “민관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” 진행 중 - 9월 중 완료 예정

□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

- 수출경쟁력 강화 - 상품의 고급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
 - ※ 세계1등상품개발: ('01) 120개 → ('02) 200개 → ('03) 300개
-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, IT·BT·NT·ET·CT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추진
 - ※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, 인적자원 육성, 법제도 등 인프라 정비

2.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점과 대응 방향

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임태희

I.우리경제의 당면 문제점

1. 정부의 낙관적 상황인식 : 일시적 불황 문제가 아니라 기업 활력 저하로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가 문제되는 상황

□ 정부는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국제 반도체 가격하락, 선진국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 (하반기 경제 운용방향,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자료 종합)

◦ 그러면서, 싱가포르·태국·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양호하다고 강조

◦ 따라서, 외부요건만 개선되면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

→ 이런 관점에서 정책 대응도 금년 말까지 재정지출 확대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그 이후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

* 최근 경기침체가 정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발표하는 등 정부태도 다소 변화

□ 그러나,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,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부진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성장잠재력 확보여부가 문제시되는 일종의 ‘Vision위기상황’

- 수출은 물량증가에 불구하고 비중이 큰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총액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
 - 수출이 반도체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‘천수답’ 같은 상태로 수출상품 고도화와 다변화 없이는 향후 지속 성장에 애로
- 특히,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으로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, 앞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
(미국 시장점유율 : ‘97년 4.6% → ‘00년 3.3%)
-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마저 크게 떨어져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
 - 기업들의 투자 부진 현상은 설비·연구개발(R&D)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, 현 상황하에서는 상당기간 지속 될 가능성
 - * 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(상장사 507개 기업대상), 69%가 내년도 투자를 감소 또는 동결 방침
 -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국내보다는 투자 여건이 유리한 해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
 - * 포철, 삼성전자, SK, LG-EDS, 삼성SDI의 경우,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 투자를 추진
 - 투자 부진 및 해외 투자선호 경향은 시장 수요 불확실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사·인력문제, 불합리한 규제·관행 등 요인에 더욱 기인 (이는 수도권 공단기업인들 방문 면담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산자부의 ‘외국인이 지적하는 한국의 투자환경’ 조사에서도 확인)

→ 이상의 문제점들은 정부주도하에 단기간내 해결 될 수 없는 어려운 사항들로서, 민간의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을 해나감이 바람직

2.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부진

□ 경제 위기극복의 기초로서 지난 2월말까지 마무리한다던 기업·금융 구조조정은 아직 과제가 산적

◦ 정부도 개별현안이 마무리 안돼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(여·야 경제정책협의회)

□ 공공부문 효율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
□ 이에 OECD, IMF도 정부에 대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

※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 예

- '98년에는 외환위기 탈출 등 어느 정도 외형적 성과가 있었으나, '99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조개혁의 강도가 약화 <삼성경제연구소>

- 정부정책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 하거나(부실기업처리사례), 이중적(강도 높은 구조조정 외치며 인원감축 자제요청)으로 추진 <단국대, 김세영 교수>

3. 공적자금 부실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크게 약화

- 기업·금융 구조조정의 타이밍 실기로 공적자금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회수자금도 상환하지 않고 재사용 함으로써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
 - 여기에다 공적자금 관리소홀 등 도덕적 해이로 낭비사례 많이 발생 (특히, 구조조정 지연은 공적자금만 축내는 결과 초래)
- * 공적자금 139조 중 이미 50%이상은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만기가 도래하는 2003년 이후 상환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

4. 조세·연금·보험 등 각종 국민부담 급증

- 최근 3년간 증가한 국민부담 규모 : 총 33조 3천 4백억원 (국민부담율 : '98년 22.9% → '00년 26.4%)
 - 세금증가 25조 2천억원(조세부담율: '98년 19.1% → '00년 22%)
 -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증가 8조 1천4백억원
- * 외국과 비교 : 미국('98), 국민부담28.9% 조세부담 22.1%
일본('98), 국민부담 28.4%, 조세부담17.5%
- 정부는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율이 37.0%로서, 우리의 국민부담율 수준은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

- 이는 주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의 높은 부담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와 이들 국가의 복지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곤란 (미국·일본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음)
-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빠른 부담증가로 중산층을 비롯한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
 - DJ정부 3년간 GDP 성장을 14.07% - 조세증가율 28.5% -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율 55.4%

5. 소득분배 구조 악화

- 특히,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산·서민층이 대부분인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
 - 상위 20% 소득자의 하위 20% 소득자에 대한 소득 배율이 '97년 4.49배에서 '00년에는 5.32배로 확대 (물론 '99년 5.49배 보다는 조금 개선되었으나 '97년에 비해 크게 악화)

6. 원칙과 일관성 부족으로 정책신뢰도 저하

- 구조조정과정에서 책임추궁과 고통분담이 무원칙하게 이루어 짐
 - 정책 실패와 감독에 책임 있는 정부와 감독기관, 부실경영 책임자 등은 그대로 두고 민간부문·종업원 중심으로 구조조정추진(퇴출, 고용조정 등)
 - 상황 논리에 따라 정부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파기

- ‘걸은 자율·속은 정부주도’ 로 무리한 정책 추진사례 빈발
 - 연기금에 대해 시한과 목표금액 정해 주식 투자토록 영향력 행사
 - 현대건설, 하이닉스 등 특정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지원토록 함
 - 집권초기 재계 자율결의 형식으로 추진된 빅딜 등 기업구조조정(소위5+3원칙)도 실상은 청와대가 주도

-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정부간섭의 여지가 더욱 증대
 - 특히, 공정거래와 금융감독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‘원칙규제 · 예외허용’ 형태로 운영
 - 이로 인해 기업들은 사안마다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

Ⅱ. 문제 해결 방향

1.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

- 정책대응은 단기적인 인기주의를 버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
- 일부 문제 기업처리 등 구조조정 현안 과제들에 대한 처리를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조속히 마무리해야 함
-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규율과 원칙을 확립해야 함

2. 위축된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

- 구체적으로
 - 1)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획기적 완화 (‘원칙자유·예외규제’로 전환, 출자총액제한, 200% 부채비율제도 등 축소폐지)
 - 2) 중산·서민층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(소득세, 법인세 부담 10% 수준 완화)
 - 3)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조사 (국세청·공정위 등)는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화 등

3. 남은 임기내 실천 가능한 정책 추진에 주력해야 함

- 재원·시행시기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발표를 남발하는 인기주의를 버려야 함
- * 8·15경축사에서 발표한 대책만 하더라도 재원이 30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4. 경제성장 둔화로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될 중산·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함

-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예산 등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을 높여야 함
-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등 절도 있는 재정운용에 더욱 노력해야 함(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·견제 장치도 강구할 필요)

5. 경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함

- 정부 스스로 법과 규정을 그리고 원칙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
- 불투명한 법규정은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투명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인 간섭여지를 최소화해야 함
- 법과 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운영 방식(구두지시, 협조요청등)을 탈피해야 함